

몹쓸
나쁜
비싼

무기展

Nasty Bad & Expensive
Weaponary

제3회 평화군축박람회 지금, 평화를 이야기 하자

Peacenow2012.tistory.com

몹쓸·나쁜·비싼 무기 / 무기증강반대

확산탄 / 죽음의 비

무인공격기 / 소리없는 살인자

미사일방어체제 / 21세기 모순矛盾 전쟁

핵무기 / No 핵무기 Yes 비핵지대

거대한 무기 증강 사업 이대로 좋은가?

초대형 무기 증강 사업, 군수업체들의 이익으로

2012년에만 신규 초대형 무기 증강 사업들이 속속 추진

- ▷ 공군의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8조 2905억원)
- ▷ 육군의 대형 공격헬기 도입 사업(1조 8384억원)
- ▷ 해군의 해상 작전헬기 도입 사업(5538억원)이 2012년 안에 기종 선정을 목표로 진행 중임
- ▷ KF-16 전투기 성능 개량에 1조 8,052억원,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에 5,002억원
- ▷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확보에 3,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사업이 시작됨

무엇이 문제인가

- 이들 사업들은 현 정부 임기 말에 한꺼번에 추진되는 초대형 무기 도입 사업으로 국가예산에 대한 고려와 적절한 평가 없이 계약을 서두르고 있음
- 일부 사업은 구입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국회 국방위원회도 사업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현실성을 결여되어 있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음
- 입찰공고, 가격협상, 시험평가, 기종검정 등 장시간에 걸친 신중한 절차가 필요함에도 초고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한국은 외국의 무기 군수업체들에게 큰손이 되었고 결국 막대한 국민 세금은 해외 군수업체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됨. 이미 한국은 지난 5년간 세계 2위의 무기 수입 국가였으며 미국산 무기 수입은 세계 1위였음(SIPRI)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과도한 무기 도입(수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밖에 보지 않을 수 없음

2012년 기종 선정을 목표로 진행되는 주요 신규 무기 증강 사업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	8조 2905억원
대형 공격헬기 도입 사업	1조 8384억원
해상 작전헬기 도입 사업	5538억원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	1조 8052억원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	5002억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도입	3800억원

〈출처 : 국방부 보도자료〉



공격적 계획에 따른 무기 도입 사업, 한반도 평화 역행 우려

적극적 억제에 따른 막대한 공격형 무기, 안보가 아니라 대립만 부추길 위험

정부는 2009년에 '국방개혁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무기 증강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국방부는 선제 타격과 공격적 전략
(적극적 억제전략) 지침을 발표해 왔음.

일련의 공격형 첨단무기들을 새로이 갖추는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

- 육군 차원에서는 차기 전차(K-2) 개발, 공격헬기(KAH) 개발 및 대형공격헬기 구입, 차기 다련장 (MLRS) 개발, 차기 장갑차(K-21) 개발, 지대지 탄도미사일 증강 등으로,
- 해군 차원에서는 이지스함, 차기 구축함(KDX), 차기 잠수함(KSS-II/III), 차기 호위함, 차기 고속정, 차기 상륙함, 상륙 기동헬기, 해상작전헬기 등의 개발과 획득으로,
- 공군 차원에서는 차기 전투기(FX), 한국형 전투기(KF-X), 정밀유도폭탄,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의 개발 및 도입으로 주요 무기들을 고비용의 첨단무기로 새로 바꾸고 있음.

무엇이 문제인가

- 이러한 무기 사업들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며 관리유지비 또한 엄청남.
이는 모두 세금으로 감당해야 함.
- 공격형 무기의 대량 획득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는 헌법에 위배될 수 있음.
- 방어를 위한 적정 수준의 군사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진행되는 공격적 계획과 첨단무기들의 전략적 구축은 한반도 평화 노력이 아니라 군사적 대립을 유도할 뿐이며 동아시아의 지역적 갈등 역시 부추기게 할 것임.



주요 무기 증강 계획	
육군	차기 전차(K-2) 개발 공격헬기(KAH) 개발 및 대형공격헬기 구입 차기 다련장(MLRS) 개발 차기 장갑차(K-21) 개발 지대지 탄도미사일 증강 등
해군	이지스함 사업 차기 구축함(KDX) 사업 차기 잠수함(KSS-II/III) 사업 차기 호위함 사업 차기 고속정 사업 차기 상륙함 사업 상륙 기동헬기 사업 해상 작전헬기 사업 등
공군	차기 전투기(FX) 사업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정밀유도폭탄 사업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사업 등



〈출처 : 국방부, 방위사업청 보도자료〉

국산 무기 개발은 언제나 바람직한가

무리한 국산 개발이 불러온 부실, 비리의 온상으로 전략

전차, 장갑차, 자주포, 다련장, 헬기, 전투기,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미사일 등 각종 무기들을 국산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 국산 개발에 착수하면 공장이 유지될 만큼 많은 장비를 생산해내야 하는 단점이 있음. 단 1개의 부품의 개발 차질도 많은 공장에 영향을 미침.
- 차기 전차 K-2의 개발의 경우, 파워팩(엔진과 변속기) 생산에 문제가 발생해(88개 항목 중 18개 항목 기준 미달) 개발 계획이 상당 기간 중단되었고 결국 독일제를 수입하기로 결정되었음. K-2 전차의 부품을 만드는 업체는 1400개, 이중 파워팩 관련 업체는 300 개였음.
- 국산 개발은 군의 입장에서는 일정량 이상의 무기를 반드시 사야 하므로 예산을 많이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득권 유지 수단이 됨.
- 80~90% 국내기술로 개발된다는 식으로 홍보하지만 부품 및 설계 결함이나 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 과정에서 군과 업체가 결탁된 비리가 나타났음.
- 2011년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는 14개 업체, 319개 사업, 8280억원이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국산 개발이 반드시 바람직할 수 없으며, 오히려 무리한 개발 시도는 추가 예산 투입, 비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국산 개발 계획은 항상 기술 도달 가능성, 경제적 타당성 등 사전에 면밀히 검토되어야 함.

육군 무기 개발 부실 관련 내용	
K-2 전차	파워팩(엔진, 변속기) 결함 등
K1A1 전차	변속기 결함, 부품 결함 수십대
K1 전차	포신 파열 9회, 엔진 화재 3회, 변속기 불량 수십대
K-9 자주포	2005년부터 38대에 구멍, 엔진 결함
K-21 장갑차	설계 결함, 침수 등 450가지 결함

출처 :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 무기수출, 국제평화에 역행할 수도

과잉 생산의 명분이 되고 있는 무기 수출

한국 정부와 국방부는 2020년까지 무기 수출 세계 7위를 목표 (2011년 현재 17위)하며 분쟁지역에 맞춤형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국정 목표 상정

무엇이 문제인가

- 무기 수출은 방위산업체를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함. 국산 개발을 통해 수출을 하면 판매 이익이 생기며 국내 방위산업체가 계속 생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임. 지금까지 자주포, 장갑차, 탄약 등이 수출되었으며 개발을 완료했거나 개발 중인 자주포, 전차, 헬기, 훈련기, 함정 비롯해 각종 무기를 수출하려고 함.
- 군과 방위산업체는 국산개발안을 승인받고 생산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국내 판매 외에도 해외수출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무기산업의 장래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음. 이를 명분으로 무기 생산을 과도하게 산정하며 추진하려고 함. 하지만 훈련기 등의 많은 수출 실패 사례에서 보듯 수출 가능성은 밝지 않으며, 한국의 신생업체의 무기를 선택할 나라가 있을지 미지수임.
- 부품 개발에 실패하거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개발은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부품 생산업체들의 연쇄 도산 가능성도 낳을 수 있음. 이에 따른 추가 예산 지원은 항상 국민 세금으로 메워왔음.
- 군사 부문의 지출이 다른 부문들에 비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아님. 오히려 평균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훨씬 적은 편임. 1조원의 예산 투입시, 군사 부문은 8,9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데 반해 대체에너지 분야에 쓰일 경우에는 12만 2,000개, 교육 부문에는 2만개, 보건 부문에는 1만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함(Pollen and Garrett-Peltier, 2009). 막대한 군사비 부담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 전쟁을 경험한 국가로서 국제 평화를 추구하는 헌법을 가진 대한민국이 무기 수출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그리고 국가전략으로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함.
- 한국이 무기 수출 대상국가로 삼고 있는 나라들에는 터키, 인도네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분쟁국가이거나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음. 분쟁에 쓰이거나 소수 종족을 짓밟는 데 쓰일 수 있는 무기를 수출하는 일이 과연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국제평화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검토되어야 함.

주요 수출 무기	
터키	K-2 전차, K9 자주포, 장갑차, 탄약 등
사우디아라비아	K9 자주포, K-21 장갑차, 천마, 비호 등
알제리	장갑차, 군용차량 등
UAE	K9 자주포, 신궁 등
이집트	K9 자주포, 탄약 등
호주	K9 자주포, 155밀리 탄약 등
베트남	장갑차, 군용차량 등
태국	장갑차, 군용차량 등
파키스탄	ALQ-200, 신궁, 확산탄 등
인도네시아	장갑차, 탄약, T-50, KFX(계약) 등
말레이시아	K9 자주포, 장갑차 등

〈출처 : 국회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세계적으로도 이미 막강한 육군 무기들

추가적인 무기 증강 불필요

이미 넘치는 한국 육군 군사력

세계군사자료평가평회의 등이 실시하는 세계 군사력 비교에서 한국 육군의 군사력은 세계 3~4위로 평가되고 있음.

미국 CIA, 영국 왕실군사연구소, 독일 군사학술연맹, 인도 군사학평가보고서, EU 세계평화평의회, 러시아 흑해군사학회 등이 참여해 발표하는 세계군사보고서에서도 한국 육군을 세계 3위로 평가 (전시능력은 2위로 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 무기 수출은 방위산업체를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함. 국산 개발을 통해 한국 육군의 군사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임. 그러나 한국 육군이 전력 열세를 내세워 끊임없이 무기를 개발하고 도입하려 하고 있음. 육군의 무기 증강이 가져올 기회비용(다른 곳에 사용했을 때 생겼을 이익)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한국 육군은 북한에 비해 월등히 우세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음. 비록 수적으로는 북한이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노후해 질적으로 한국군 무기가 훨씬 우세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 전차만 하더라도 북한은 410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의 대부분의 전차는 한국이 1980년대에 개발한 K1 전차보다 구형임. 그럼에도 K1A1 전차 성능개량 및 양산에 2조원, K-2 차기 전차 개발과 양산에 6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세계 육군 군사력 순위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한국
4위	중국
5위	독일
6위	프랑스
7위	영국
8위	이스라엘
9위	인도

〈출처 : 세계군사보고서〉



불필요한 고성능 차기 전차 개발사업

지금 이런 전차가 꼭 필요한가

국산 개발과 대량 양산을 앞두고 있는 차기 전차 K-2(흑표)

- 현존하는 세계 최고 성능의 외국 전차와 견줄 수 있을 만큼 모든 장비가 최첨단이며 기동력·화력·생존력을 높인 차세대 국산 전차로 홍보되고 있음.



무엇이 문제인가

- 한국은 오래 전부터 쓸 만한 전차와 대포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전차를 또 대량생산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미 비대한 육군을 더욱 비대하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육군은 K1/K1A1 전차 외에도 K9 자주포, 다련장로켓포 등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음.
- 그 외에도 F-15K 같은 고성능 전폭기 등 북한 기갑전력에 대비한 막강한 화력을 보유한 상태임. 한국 육군의 기계화·기갑 전력은 북한에 비해 충분히 앞서는데도 추가로 신형 전차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일은 현재 과도하며 불필요함.
- K-2 전차 같은 고성능 전차 개발은 기술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나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엔진 등 파워팩의 결함으로 개발시험평가에서 연이어 불합격되었고 3차례나 개발 완료 시기를 연기하며 사업을 진행시켰으나 결국 1차분 100대에는 679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독일제 파워팩을 수입해 달기로 결정되었음.
- 이미 1000억원을 들인 파워팩 개발에도 추가 비용을 더 들여야 하며 정부가 자랑하는 수출 문제도 외국 부품업체와의 추가 협상이 필요해 차질이 불가피해졌음.

막대한 비용 부담을 해야 하는 무리한 국산 개발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추진되는 차기 다련장, 차기 장갑차, 헬기 등의 육군 무기 국산 개발도 지금 필요한지 전반적으로 검토되고 검증되어야 함.

	총 사업비	개발비	양산 대수	1대당 가격	
K-2 전차	6조원 가량	3125억원	300~600대	90~100억원	파워팩 개발 문제로 단가 상승
K1A1	2조 1603억원	307억원	484대	45억원	성능개량 사업에 추가 예산 투입

〈출처 : 국방부〉

평화에 반하는 대양해군론

한반도에 위협을 키울 수도

대양해군론?

- 대양해군론은 북한을 상대하는 수준을 넘어 말라카 해협까지 원해 작전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해군 전력으로 연안 방어 차원이 아닌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을 견제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공세적인 장거리 작전을 목표로 기동전단을 구축하는 것임. 이는 이지스함 사업, 대형 수송함 사업, 차기 구축함 사업, 차기 호위함, 차기 잠수함 사업 등 일련의 해군 전력 증강 사업으로 추진 중임.
- 그러나 이러한 대양해군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위협을 키울 수 있어 재검토되어야 함.

무엇이 문제인가

- 기동전단은 전략목표 타격과 해양수송로 보호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거부전력으로 상정. 해양수송로 보호라는 명분 역시 장거리 작전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 해군 혼자서는 가능하지 않음. 해양패권국가인 미국에 협력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이는 미국과의 동맹을 한반도 범위를 넘어 전 세계로 넓히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미 해군을 따라 한국 해군이 세계의 전장에 동참하는 것을 뜻함.

동아시아에서 미국 해양패권에 편승하는 전략은 중국과 군사적으로 긴장관계를 형성하거나 미·중 간의 대립에 한국이 휘말릴 수 있음. 중국과의 군사적 마찰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한반도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주변국과의 대립과 긴장을 높여 위험만 더 불러올 수 있음.

	총 배수량	1만톤 내외	5천톤 내외	2천톤 내외	1천톤급
한국	16만톤	상륙함 1척 이지스함 3척	구축함 9척	호위함 9척	초계함 24척
북한	6만톤	없음	없음	없음	3척

〈출처 : 세계군사보고서〉



이지스함 보유, 마냥 좋을 수 없다

엄청난 건조비용과 유지비용

최첨단 이지스 레이다 체계를 갖추고 각종 무기뿐만 아니라 미사일 요격 능력을 있는 이지스함을 한국은 현재 세종대왕함²⁰⁰⁸, 울곡이이함^{2010년}, 서해류성룡함^{2012년} 등 3척을 보유하고 있음. 세계에서 5번째 이지스함 보유국임.

	건조비	시스템 구축비	무장비	운영유지비
이지스함 1척	1조원	3600억원	2000~3000억원	?

〈출처 : 방위사업청 홍보자료〉

무엇이 문제인가

- 이지스함 보유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점. 무장한 이지스함은 1조2000억~3000억원에 달함. 레이다 출력 용량만 4만5000KW로 3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발전 용량임. 장착되는 각종 미사일과 어뢰는 1기에 10~30억원임.
- 이지스함의 모든 장비가 최첨단 무기이기에 유지하고 정비하는 일에만 많은 비용을 수반함. 운용 매뉴얼은 10만 페이지가 넘을 만큼 고도로 숙련된 운용 기술과 정비 기술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한 교육·훈련 비용도 엄청남.
- 1개 기동전단 창설은 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3개 기동전단을 거느린 전략기동함대를 건설하려면 6조5000억원이 소요되기에 국민 세금으로 떠받쳐야 할 이러한 전력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임.

이지스함 및 기동전단 운용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절한 해군력과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임. 그럼에도 해군은 추가적인 기동전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



공군의 고비용 전투기 도입 사업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고비용 전투기 사업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

2차까지 마무리되고 3차 사업이 2011년부터 시작됨.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보라매)은 경제적 타당성, 기술도달 가능성 등에서 큰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되었음에도 2011년부터 탐색개발이 시작되었음. 이 두 전투기 도입 사업은 각각 8조3000억원, 5조원이 이 투입되는 대형 획득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재 공군 전력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항공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술 이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연 항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지 의문시됨.
- 한국은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 1~2차에서 미국 공군이 비행을 금지하고 구매도 중지한 미국제 전투기 F-15를 8조원의 예산(1대당 1300억원)을 들여 직구매했음. 60대를 추가 구매하는 3차 사업은 8조3000억원의 예산으로 2012년 선정 과정에 있음.
- 전투기를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미 강력한 공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새로 투입되고 있음. 당장 필요하지도 않고 유지비용도 엄청난 고비용의 전투기 도입은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임.
- 현재 한국 정부는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 절차를 비현실적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음. 대상 기종들이 아직 개발단계인데다가 기체가 검증되지 않았고, 성능보완 문제로 당초 목표보다 구입단가가 상승 중에 있음. F-35의 경우 현재만도 가격이 1.5배 상승한 상태여서 추가 비용이 더 들지 않을 수 없음. 또한 개발 기종들은 초기형이기 때문에 과연 도입 후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의문임.

면밀한 검증 과정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이유도 알 수 없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

FX 사업	구입 연도	구입 비용	기종/대수
1차	2005-08년	5조 6000억원	F-15K / 40대
2차	2010-12년	2조 3000억원	F-15K / 20대
3차	2012-19년	8조 3000억원 ~ ?	? / 60대

〈출처 : 국방백서〉



국가예산 축널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북에 비해 월등한 공군력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보라매 사업)

-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적 타당성과 기술 도달 가능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국방연구원(KIDA)도 KDI 평가에 동의하면서 사실상 무산되었던 사업임.
- 그러나 2009년 공군이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하향조정하고 국제공동개발이라는 비용절감 방안을 내놓으면서 사업이 재추진됨.
- 공군은 2009년부터 연이어 예산을 상정하면서 추진 의사를 강력히 피력했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를 부담하고 50대를 구매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되살아났음.

무엇이 문제인가

- 확실한 기술 기반도 없고 기술 이전을 받아야 할 분야가 많은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형편임. 돈, 기술, 경험의 부족으로 개발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력상 필요하지 않은 개발 사업에 나서고 있어 국가 예산만 계속 축널 가능성이 높음.
- 현재 공군의 전투기 전력 증강 사업은 차기 전투기 120대 구매에 20 조원을 쓰고 한국형 전투기를 새로 개발-양산하는데 5조원 이상을 쓰는 것임. 이 사업들은 획득 시기마저 겹치고 있어 과도한 중복 재정 지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미 공군력은 북에 비해 월등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전투기 도입이나 개발은 불필요하며 예산 낭비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임.



	4세대 전투기	기타 주력 전투기
한국	F-15K 62대 KF-16 136대 F-16 39대	F-4 120대 F-5 170대
북한	Mig-29 30대	Su-7 40대

〈출처 : 국방백서, 세계군사보고서〉

수많은 헬기 도입 사업

전력 공백 없는데도 엄청난 예산 투여

현재 수많은 헬기 도입 사업 추진 중

- 한국형 기동헬기 개발, 공격헬기 개발, 대형 공격헬기 수입, 해상작전헬기 수입 등 다종의 헬기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 노후한 헬기를 대체하고 헬기 제작 기술을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은 애초 과도한 예산 낭비를 이유로 취소되었던 사업임.
- 그러나 기동헬기 우선 개발로 사업이 부활하더니 2011년부터는 공격헬기 개발도 시작되었음.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는 중형 헬기로 개발되어 2012년부터 총 245대를 육군에 납품할 예정임.
- 또한 한국형 기동헬기와 공격헬기와는 별개로 국방부는 따로 대형 공격헬기를 36대 직수입(1조8384억원)하고 해상 작전헬기도 8대 직수입(5538억원)하기로 결정했음.

무엇이 문제인가

- 이러한 추진 결정의 배경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중복 투자 의혹, 기동헬기 개발에 기반한 공격헬기 개발이라는 애초 목표를 포기하고 새로 소형 공격헬기를 개발하려는 이유, 미국의 대형 공격헬기 구매 강요에 따라 소형 헬기를 개발한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었음.

한국군의 보유 헬기는 이미 북한보다 2배 이상 많아 전력 공백의 우려가 없는 무기임.
한국은 세계 6위의 헬기 보유국가이며 개발하고 도입될 헬기를 포함하면 세계 3위의 보유국가가 됨.



헬기 보유국	한국	북한	일본
헬기 대수	700대	320대	690대

〈출처 : 국방백서, 세계군사보고서〉

엄청난 예산 먹어치우는 헬기들

군사적 타당성도 결여



국방부와 업체는 기동헬기의 주요 구성품 70%를 국산화했고 앞으로 핵심기술을 더 확보한다면 공격헬기의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함. 헬기를 국산화하면 헬기 수입 비용이 절감되고 해외 헬기 시장에 수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함.

그러나 이러한 헬기 개발사업은 투여한 막대한 예산에 비해 이익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시장이 작아 수출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총 사업비	개발 비용	양산 비용	운영유지 (30년)	양산 대수	1대당 가격
기동헬기	9조 1029억원	1조 3113억원	4조 1566억원	3조 6350억원	245대	170억(개발비 포함 220억)
공격헬기	10조 이상 추산	5조 ~ ?		6조	210대	240억~?
대형 공격헬기수입	1조 8384억원			36대 수입		
해상 작전헬기수입	5538억원 ~ ?			8대 수입	120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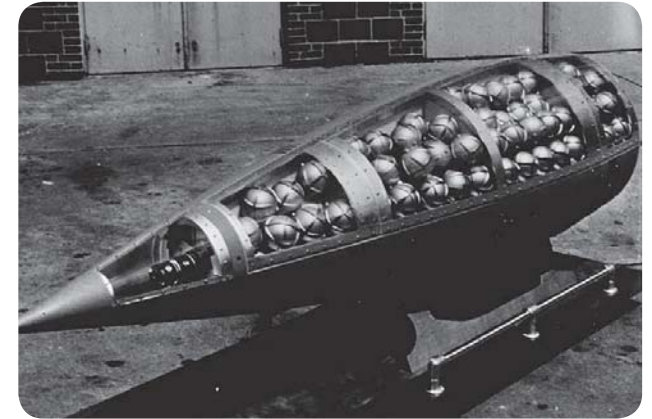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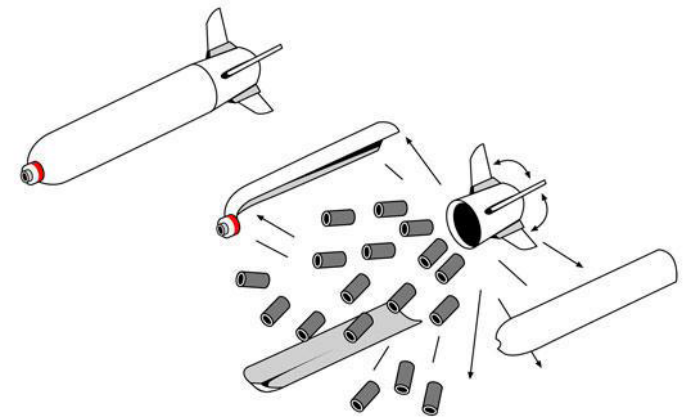
〈출처 : 국방부 보도자료, 홍보자료〉

헬기 자체는 전술 운영의 문제로 군사적 타당성 논란이 많은 무기이며, 이미 20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감축되고 있는 무기임. 최대 보유량을 지닌 미국도 최근 8천대에서 4천대로 줄이고 있음.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는 헬기의 생존률이 떨어져 효과가 의문시됨. 따라서 이렇게 많은 헬기의 대량생산과 구매가 현재 필요한지 재검토되어야 함.

무엇이 문제인가

- 기동헬기의 경우, 교체 대상 기종은 1대당 평균 10억원의 헬기지만, 한국형 기동헬기는 1대당 200억원에 달하며 총 사업비가 10조원에 육박함.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은 기동헬기가 생산유발액 5조7000억원, 부가가치액 1조9000억원, 기술과급액 3조8000억원 등 모두 11조4000억원으로 분석했음. 사실상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임.
- 헬기라는 단일무기를 개발하고 도입하는 데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지만 산업 활성화, 고용 창출, 투자 효율 등에서 불분명한 사업임. 한국개발연구원, 감사원 등에서도 편익 계산은 엄밀한 측정이 불가능하며 고비용에 비해 이익이 적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음.
- 외국의 유명 헬기 기종에 비해 한국형 헬기는 비용이 비싸 수출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편임. 1대당 240억원의 대형 헬기인 UH-60과 비용면에서 비슷한 수준임. 공격헬기의 경우 소형 헬기임에도 대형 공격헬기의 가격과 맞먹을 가능성도 있음.
- 이러한 가격의 한국 신생업체의 무기를 선택할 나라가 있을지 미지수임. 게다가 아직 상당한 핵심부품들을 수입해서 만드는 처지라 국산 기술이 의문스럽고 부품을 수입해서 팔아야 해 이익이 있을지도 의문임.
- 미국의 아파치 헬기(AH-64D)를 염두에 둔 대형공격헬기 사업도 북한의 기갑전력과 국지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한반도 지형과 북한의 전력을 감안할 때 필요성 문제가 지적받아 왔으며, 국회보고서도 “대형공격헬기에 의한 적의 중심타격 개념은 작전 운용상 한계를 보인다” 며 그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원거리의 잠수함을 탐지하고 공격하기 위해 추진되는 해상작전헬기 도입비용은 애초 정부가 밝힌 5538억원의 2배에 달하는 액수로 밝혀지면서 도입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죽음의 비 확산탄



확산탄(Cluster Bomb)이란

- 확산탄 또는 집속탄, 모자(母子)탄, CBU(Cluster Bomb Unit)
- 한 개의 확산탄 안에 수십, 수백 개의 소폭탄이 가득 채워져 있어 공중에서 터지면서 안에 들어있는 작은 폭탄들이 흩어지며 연쇄적으로 폭발
- 넓은 지역에서 다수의 무차별 살상과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인살상용 산탄형 폭탄
- 보통 축구장 3-4배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며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
- 폭발하지 않은 불발탄은 이후에도 오래도록 남아있다가 지뢰처럼 작용
- 확산탄으로 인한 사상자의 98%가 민간인
- 죽음의 비 확산탄은 가장 잔인한 폭탄 네이팜탄, 침묵의 살인자 지뢰와 더불어 대표적인 비인도무기



확산탄의 피해



확산탄의 심각한 문제는 많은 소폭탄들이 불발탄으로 남는다는 점

- 2003년 이라크전쟁 : 3주 동안 미국 1만 782발, 영국 2,170 발 사용, 뿌려진 소폭탄 수는 모두 200만 개, 그중 약 9만 개가 불발탄으로 추산(휴먼라이츠워치)
-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 약 400만 개의 소폭탄 사용, 그중 100만 개가 불발탄(유엔)
- 라오스 : 8천만 개의 소폭탄이 불발탄으로 남아 수천 명이 넘는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희생자 계속 발생

확산탄으로 인한 사상자의 98%가 민간인, 그 중 1/3은 어린이들!



“2003년 어느 날, 난 두 아들과 함께 강가에서 낚시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물 속에서 폭탄을 발견했는데,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욕심으로 그 폭탄을 강가로 건져 올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손에서 터졌고, 나는 내 두 팔을 잃었습니다. 이제 난 양팔이 없으니 가족들을 부양하지 못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 확산탄으로 인해 두 팔을 잃은 라오스의 트아트Dtar



“여동생은 그것을 발견해서 내게 가져다 주었어요. 내가 받으려고 할 때 그것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집자마자 폭발하여 손을 다쳤어요. 엄마는 나를 의사에 데려갔지만 손을 절단해야 한다고 했어요. 엄마는 울기 시작했고 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폭발할 때 소리가 너무 커서 청각에도 큰 손실을 주었어요. 이후로는 잘 듣지도 못해요. 옆에 있었던 여동생도 청각을 잃었고,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었어요.”

- 남부 레바논의 12살 소녀 자하르Zahra

확산탄 금지를 향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확산탄 사용	91년 이라크, 쿠웨이트 99년 유고슬라비아에서 나토의 확산탄 사용	2001년 아프가니스탄 2003년 이라크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확산탄 사용	러시아-그루지아 분쟁에서 확산탄 사용			
1960-7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2006년	2007년	2008년	2010년	
국가 차원의 금지협약이 최초로 제안되기도 함	1997년 지뢰금지 협약 1999년 특정재래식 무기금지협약CCW 회의에서 휴먼라이츠워치가 확산탄에 대한 세계적 모라토리움(사용 중단) 요청	CCW 당사국들이 전쟁잔류폭발물ERW 문제 논의시작 2003년 11월 확산탄 금지연합CMC 결성 CCW 당사국들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제5의정서 채택, 하지만 확산탄 문제 해결에는 불충분	2006년 11월 CCW 회의에서 국제협약 제안 거절당함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CCW 밖에서 확산탄 규제를 위한 독립적인 프로세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	오슬로 프로세스 시작 2007년 2월 오슬로 회의 49개국 참여 2007년 3월 동남 아시아 지역회의를 시작으로 각 지역별 모임 결성	더블린 협상 : 2008년 5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외교회의 107개국의 만장 일치로 확산탄 금지협약CCM의 탄생 2008년 12월 오슬로에서 조인식 진행, 96개국 서명 4개국 비준	2010년 2월 협약발효 위한 최소조건인 30개국 비준달성, 6개월 후 조약발효 2010년 8월 1일 확산탄금지협약 정식 발효	2010년부터 매년 당사국회의 개최 2012년 10월 현재 111개국 서명, 75개국 비준

확산탄금지협약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CCM

- 확산탄의 사용, 생산, 비축, 이전에 대한 금지 명시
- 확산탄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 의무, 오염된 땅의 정화
- 투명한 연례보고서 제출의무, 위험 교육, 이를 위한 국제적인 공동지원 제공 포함
- 국제적인 확산탄금지운동이 만들어낸 매우 의미있는 성과
-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생산국은 참여하지 않는 등 한계지점은 존재
- 2010년 8월 1일 확산탄금지협약CCM 정식 발효 후 매년 당사국회의의 개최



확산탄 주요생산국이자 수출국, 한국

최근 몇 년간 확산탄 문제에 쏟아진 국제적 관심에 비해 한국 정부는 여전히 무책임으로 일관

한국은 미국이 생산하는 모든 종류의 확산탄을 수입, 신형 확산탄은 계속 확보하고 있으며 구형 확산탄의 폐기와 관련된 계획은 없음

자랑스러운 한국군 무기로 확산탄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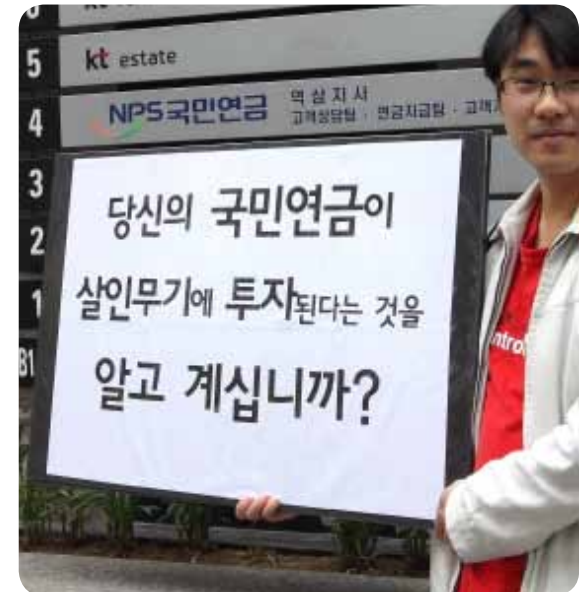
한화 MLRS(다련장 로켓시스템)용 로켓탄과 헬기, 항공기에서 투하되는 확산탄을 생산, 70mm 다련장 개발, 차기 다련장 개발 진행 중, 2008년 파키스탄에 확산탄 수출한 것으로 추정

풍산 주로 대포에 쓰이는 확산탄을 생산, 2004년 파키스탄과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한화와 풍산 두 회사 모두 확산탄생산이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로 투자대상에서 제외

확산탄 생산기업 한화와 풍산에 투자하는 회사들

천안북일교육재단, 미래에셋증권, 국민은행, 신한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HMC투자은행,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대우증권, 동부증권, SK증권, 동양증권, 우리투자증권, 한화증권, 국민연금관리공단, 부국증권, 대신그룹, 유진투자증권, 한양증권, HI투자증권, KTB자산운용, 마이다스자산운용, 농협, 삼성그룹, 신양증권



한국은 왜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는가?

한국정부 “한국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산탄이 필요하다” “확산탄의 문제는 불발탄이며, 따라서 기술적 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

풍산 “한국산 확산탄은 자폭 능력이 있어 민간인을 해치지 않는다”

한화 “방어 목적으로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진 사업이다”



불발탄의 문제는 기술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불발률 1% 미만의 확산탄을 허용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한국도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 미국으로부터 대량 수입(CBU-105 WCMD, 바람수정 확산탄)
- 이미 이전의 폭격에서 확인되었듯 불발률 1%는 실험일 뿐 실전 상황에서는 10%가 넘기도 함.
- 수백만발이 뿌려지는 상황에서 1%의 불발탄도 엄청난 숫자(2006년 당시 레바논 남부에는 약 400만발의 확산탄이 뿌려졌는데 이중의 1%는 4만발임)

아무리 기술발전이 된다고 해도 무차별적인 폭격을 퍼붓는 확산탄 자체의 비인도성을 해결하지는 못함.

확산탄으로 인한 사상자의 98%는 민간인이며 따라서 확산탄의 비인도성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널리 인정되고 있음. 최근 전쟁까지 거의 모든 전쟁에 확산탄이 대량 사용된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무기이며 최근 활발히 전개되는 대표적인 무기 금지운동의 대상임. 한국은 하루빨리 확산탄금지협약에 서명·비준해야하며, 확산탄 생산과 수출·수입을 중단해야 함.

가장 잘 죽이는 확산탄, 다련장 로켓(MLRS)

치명적인 살상력을 가진 “강철의 비”

다련장 로켓시스템(MLRS,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은 지대지 로켓 및 유도탄 사격체계로서, 육군이 가진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화력 무기라고 할 수 있음. 다련장 로켓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넓은 지역을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다는 점. 다련장 로켓탄 1발은 축구장 3개 면적(6000평)을 일시에 초토화시킬 수 있으며, 다련장 로켓시스템(MLRS) 1개 포대(3문)가 일제 사격을 할 경우 1분 안에 2만3000개가 넘는 소폭탄을 목표지역에 쏟아부을 수 있음. 걸프전 당시 미군이 사용하면서 ‘강철의 비를 뿌리는 무기’로 악명이 높았음.



한국의 다련장(MLRS)

K-136 구룡(130mm 다련장)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되어 1981년부터 실전배치. 36발의 로켓을 장전하며 개량형 로켓탄의 경우 최대 36km까지 발사 가능. 탄두는 재래식 고풍탄두와 1만6000개의 성형파편이 들어간 개량형 고풍탄두가 있음.

M270(A1) MLRS(227mm 다련장) 1997년 미국과 계약을 체결하고 1998년부터 도입. 60초 이내에 12발의 로켓 발사 가능. 1998년 1차 29문(4700억원), 2002년 2차 29문 총 58문(5000억원)이 직수입해서 도입됨. 다련장 로켓시스템의 경우 로켓탄과 발사기는 물론 탄약수송차량, 지휘장갑차량, 구난전차 등도 한꺼번에 직수입했음. 2003년 이후에야 한화에 의한 개발·생산이 시작됨.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확산탄이라고 하는 에이태킴스(ATACMS, 1발 가격은 13억원)는 두 번에 걸친 MLRS 도입과정에서 총 222발이 도입됨. 소폭탄은 최대 950발이 내장, 개량형은 최대 사거리가 300km. 다련장 로켓시스템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서해5도에 전면 배치되었고 발사 훈련이 국방부에 의해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있음.

70mm 다련장 소요제기도 없고 전력화되지도 않았으나 한화에서 2006년 개발하여 수출한 바 있음.

차기 다련장 로켓시스템(개발 중) 2013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2009년부터 차기 다련장 로켓시스템 개발 사업이 진행 중. 사거리 80km의 230mm 다련장 로켓시스템(MLRS)을 한화에서 개발하고 있음.

무조건 강력한 무기가 많으면 좋은가?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로 국제사회가 금지하는 무기 개발

다련장 로켓시스템은 확산탄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무기로, 국제사회가 2008년부터 금지협약을 만들어 생산·사용·비축·이송을 금지하고 있는 확산탄은 비인도적 무기로 규탄받고 있음.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점점 방어용을 넘어 공격적 전략의 일환으로 증강되고 있음. K-136 구룡, M270, M270A1 MLRS, 에이태킴스 등을 이미 갖추고 있는데도 새로운 차기 다련장 로켓시스템을 국산 개발·양산하고 배치하려고 함. 명백히 과도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M270(A1) 다련장의 경우 12발 M26 로켓탄을 60초 내에 발사하며, 1발의 로켓탄은 644개의 소폭탄이 내장되어 있음. 이 소폭탄 1개는 수류탄 크기로 100mm 철갑을 관통하는 파편들을 퍼뜨림. 남북이 서로 이러한 확산탄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등에서 벌어졌던 일보다 훨씬 큰 고통을 낳을 것임. 한반도의 아름다운 산천은 초토화될 것이며 온통 불발탄으로 지뢰밭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함. 국가의 안보는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많이 보유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님.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차기 다련장 개발 사업

그럼에도 이 무시무시한 무기를 더 강력하게 더 많이 배치하기 위해 개발 중임. 2006년에 계획이 결정되고 2009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차기 다련장 개발 사업은 2014년 전력화를 목표로 총 사업비 1조9269억원을 들여 70대의 차기 다련장 로켓시스템을 개발·양산하는 사업임. 로켓이 수천발 단위로 함께 생산됨. 탄약 소모량이 워낙 많은 다련장 로켓은 전력 유지비용만도 엄청남. 현재 M270A1 다련장이 대당 57억원, 로켓 탄두 1개가 3000만원이 넘는 점을 비추어볼 때 차기 다련장 70대에 들어갈 로켓 수량을 생산하려면 끊임없이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야 함.



무인기, 소리 없는 살인자



무인기란?

드론(Drones) 혹은 UAV(Unmanned Aerial Vehicles)로 불림. 조종사 없이 원거리 기지에서 원격조종으로 작동을 하며, 카메라를 장착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직접적인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용도로 사용.

미국 부시 행정부가 2001년 아프가니스탄과 2003년 이라크 침공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무인정찰기와 무인 공격기를 사용하기 시작. 2009년 오바마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파키스탄 국경지역으로까지 대폭 확대시키면서 "미국의 대테러전쟁은 무인기가 치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인기 사용이 급속도로 증가.

미국 정부는 현재 두 개의 무인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 하나는 미 국방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공식적으로 전쟁이 진행 중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맡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중앙정보국(CIA)이 이른바 비공식적인 전쟁(파키스탄, 예멘, 소말리아 등)을 위해 미국 버지니아주 랭리의 CIA 본부에서 비디오 화면을 보며 무인기를 조종함.

무인기는 자국군의 인명피해를 우려할 필요 없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정찰과 공격을 수행할 수 있어 미국 정부는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에서의 무인기 사용을 점점 늘리는 추세에 있음. 공식적으로 무인기를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미국·영국·이스라엘 등 3개국. 50개국 이상이 무인기 개발이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한국 역시 1,800억 원을 들여 무인 정찰기 개발 중. 올해는 5천억 원을 투입해 무인 공격기 개발에 착수함.

미국의 무인기 기지 확대 정책

자료 출처 _ 영국 인디펜던트 (2011. 9. 22)



미국이 운영 중인 무인기 기지

무인기가 출격하는 비밀기지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미국 네바다, 아프리카의 지부티, 인도양의 세이셸 군도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예멘의 <아라비아반도 알카에다>와 소말리아의 <알 샤밥>을 테러와의 전쟁의 주적으로 상정하고, 이들을 공격하기 위한 무인기 기지를 예멘과 에티오피아에 추가로 건설 중인 것으로 전해짐.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나 오만에 기지를 건설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현재 미국 정부는 기존의 지부티와 세이셸 군도의 기지도 확장하는 등 세계 어디서든 무인기 출격이 가능하도록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중에 있음.

아라비아반도 비밀기지 :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새로 계획 중인 기지 : 에티오피아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확장 예정 기지 : 세이셸 지부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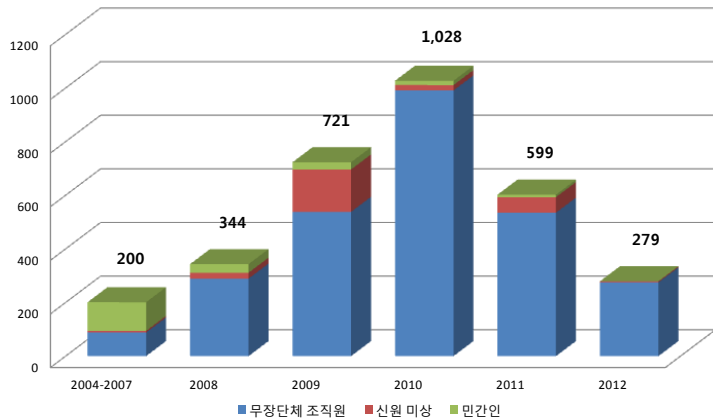
현재 운영 기지 :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공격 대상 국가 : 리비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예멘 소말리아

무인기로 인한 인명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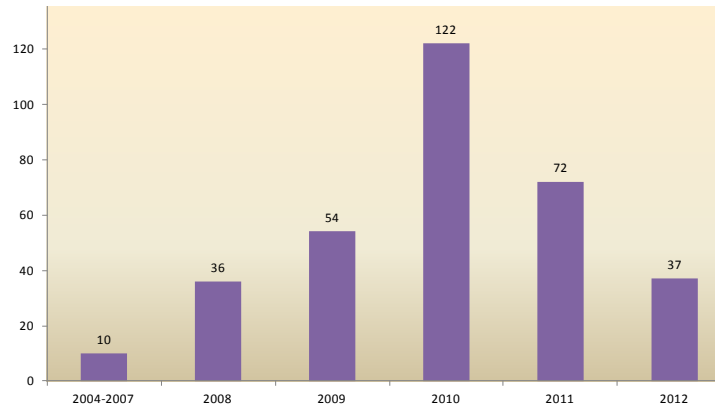
파키스탄 내 무인기로 인한 사망자

〈출처〉 Counterterrorism Strategy Initiative (2012, 8, 24)



파키스탄 내 무인기 사용 횟수

〈출처〉 Counterterrorism Strategy Initiative (2012, 9, 2)



인간성을 상실한 게임 같은 전쟁

무인기는 전장에서 수천 km 떨어져 있는 기지에서 마치 오락게임을 하듯 조종이 이뤄지기 때문에 운영요원이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인명을 살상하게 만들고 있음. 또한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정보가 잘못될 경우 민간인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실제 다수의 민간인 피해를 낳고 있음.

현재 무인기 사용이 가장 집중된 지역은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 미국은 이 지역의 무장단체들이 아프가니스탄 저항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집중적인 무인기 공습을 가하고 있음.

올해 1월부터 9월 2일까지 파키스탄에서 벌어진 37건의 무인기 공격 사망자는 175명에서 279명 사이로 추정. 매 공격마다 평균 6.2명의 사람들이 사망함. 파키스탄 보도에 따르면, 2006-2009년 자국 내에서 벌어진 미국의 무인기 공격 60여 건 가운데 실제 무장세력을 목표로 한 것은 10건에 불과했다고 전함.

**그래프에 표시한 사망자와 부상자의 숫자는 언론보도로 확인된 숫자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사망자와 부상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남성 사망자 대부분이 무장단체 조직원으로 분류되므로 민간인 사망자 역시 공식 통계보다 많을 것으로 추측됨.

탈레반과 CIA, 누가 진짜 테러리스트인가?



“수많은 파키스탄 민간인들을 살해한 미군의 영토침해는 이제 더 이상 묵과될 수 없으며, 우리에게도 자위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는 걸 알렸음에도 미군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보복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파키스탄 육군 대변인 무라드 칸 소령

파키스탄 국민들은 물론이고, 그 동안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협력해왔던 파키스탄정부도 무인기 공격을 심각한 주권침해이자 살인행위라 비판

“사람들을 향해 폭탄을 떨어뜨리고 발포를 하는 비행기(무인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긍정적인 말을 해줄 수 없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

워싱턴 포스트지가 카르자이와의 인터뷰에서 파키스탄 내 무인기 공격에 대한 의견을 묻자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

“오늘날 가장 많은 표적살해를 자행하는 국가는 미국 ... 특히 책임을 묻기 어려운 비밀정보기관의 특성상 CIA의 무인기 운용은 중단돼야 한다” 비사법적 즉결 또는 자의적 처형에 대한 유엔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필립 앨스턴

“CIA의 무인기 운용은 사람들을 더 빨리 신속하게 살해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미국의 평화운동가 신디 시헌

“탈레반과 CIA, 누가 진짜 테러리스트인지 무인기 공격의 희생자들에게 물어라!” 무인기 공습 반대 시위에 참가한 파키스탄 시민

21세기 '모순^{矛盾}전쟁'

MD란?

오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창이 나온다면,
내일은 그 창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나오는 법!
이 창과 방패의 경쟁 가운데 탄생한 것이 바로

MD Missile Defense, 미사일방어체제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게임으로도 비유되는 MD는
말 그대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미사일이나 레이저로 요격해 파괴하는 시스템



미국의 역대 MD 정책 변화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정부

레이저를 장착한 위성들을 우주에 배치해 수천 기에 달하는 소련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우주 공간에서 요격한다는 전략방위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일명 '스타워즈'로 불린 방어계획 수립

1990년대 초 조지 부시 정부

탈냉전의 정세변화를 반영하고 높아진 지역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SDI 규모를 축소하고 방호의 범위는 확장시킨 전지구적제한공격방어계획(GPALS, Global Protection Against Limited Strikes) 추진

1990년대 클린턴 정부

NMD와 TMD로 나눈 미사일방어체제 개념 수립. NMD(National Missile Defense, 국가미사일방어체제)는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이를 탐지, 요격, 파괴하기 위한 시스템. TMD(Theater Missile Defense, 전역미사일방어체제)는 해외 주둔 미군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

2000년대 조지 W. 부시 정부

NMD와 TMD를 통합해 바다-육지-항공-우주를 연결하는 다층적이고 전지구적 미사일 방어망을 추진. 두 개념을 MD라는 개념으로 통합.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제한협정에서 탈퇴하고 MD 구축 본격화

탄도탄요격미사일(ABM)제한협정: 미국과 구소련이 1972년 체결한 군비통제 조약으로서 MD구축 제한을 포함함

오바마 정부 현재

미국본토 방어용 MD 는 속도조절, 동유럽, 동북아, 중동 등 지역 MD 구축에 박차

MD, 이렇게 작동합니다



초기단계방어 Boost Defense Segment

미사일 발사 직후

상대의 미사일이 발사된 후부터 대기권에 진입하기 직전까지의 단계

이 단계에서는 조기경보위성과 레이더를 통해 발사된 미사일을 탐지. 미사일이 발견되면 이는 개조된 보잉747 항공기에서 레이저(ABL)를 쏘아 요격할 수 있음

초기단계는 비행속도가 가장 느리고 미사일이 비교적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가장 요격이 쉬운 단계.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는 대응 가능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요격 태세를 갖춘 항공기가 미사일이 발사되는 지점과 가까워야 성공할 수 있음

항공기탑재레이저 (ABL, Airborne Laser)

항공기에서 고에너지 레이저빔을 쏘아 상대의 미사일을 추진단계에서 요격



중간단계방어 Midcourse Defense Segment

우주 비행

미사일이 고도 100km의 대기권을 돌파하는 단계

탄두가 운반로켓에서 분리되어 우주공간을 비행. 조기경보레이더(X-Band)는 그 탄두를 인식, 추적하며 경로를 계산. 동시에 우주적외선위성은 요격을 어렵게 하기 위한 교란제(decoy)와 진짜 탄두 구분에 성공해야 함. 끝으로 지상에 배치된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과 해상의 이지스함에 장착된 SM3(Standard Missile 3)와 같은 방어미사일이나 우주배치레이저(SBL)가 발사되어 탄두를 요격함

지상발사형중간단계방어 (GMD, 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GBI 미사일, X밴드 레이더 등으로 구성되며, 지상에서 발사돼 대기권 밖의 탄두미사일을 요격

이지스탄도미사일방어(ABMD, Aegis Ballistic Missile Defense)

이지스함에 장착된 스탠다드미사일(SM) 등을 발사해 해상에서 요격



최종단계방어 Terminal Defense Segment

대기권 재진입

탄두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최종단계

이 단계에서의 요격은 탄도탄이 고도 100km 이하로 떨어질 때 요격체가 직접 목표물에 부딪혀 파괴시키는(hit-to-kill) 전역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요격미사일과 탄도탄요격미사일(ABM)의 일종인 이지스함의 SM2, 지상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등을 통해 이루어짐

패트리엇3 (PAC-3)(Patriot Advanced Capability3)

대표적인 탄도탄요격미사일(ABM)으로서, 지상에서 발사, 요격

전역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Theater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최대 150km 고도까지 도달이 가능하며, 주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



‘평화를 지키는 무기’의 역설

돈 먹는 하마

MD, 무엇이 문제인가?

미국은 지금까지 MD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 부었고, 한국이 이 무한경쟁에 동참해주길 요구해옴

미국의 바람대로 한국이 MD에 참여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 20조원 + α !

이는 가구당 한달 평균 건강보험료(5~6만원) 무상지원액의 두 배

비용 대비 효과를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높음.

비용 대비 효과 ‘0’

1차 걸프전 당시 PAC-2의 스커드 미사일 요격률은 거의 ZERO!

2003년 3월, 이라크 침공 당시 미국과 영국의 전투기 1기씩을 격추해 ‘아군 잡는 미사일’로 불리기도 함

설령 기술발전으로 인해 MD가 제대로 작동하게 된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생각해볼 수 있음

가장 강력한 창을 보유한 나라가 상대방의 창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패까지 보유한다면 창을 쓰는 것이 훨씬 자유롭게 됨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공격력을 보유한 미국은 MD의 필요성을 말할 때, 군사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강조해옴

MD는 정말 방어용 무기일까?

이는 MD 보유가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

이로 인한 불안감은 너도나도 방어용 무기를 개발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MD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공격용 무기의 개발을 촉진시켜 군비경쟁은 더욱 가속화

실제로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은 MD에 대해 해전력을 보다 강화해옴

‘우주전쟁’ 앞당겨

나아가 MD개발은 군비경쟁을 우주로까지 넓힘으로써 ‘우주 전쟁’의 시대를 앞당기고 있음

MD와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

중국

미국 MD체계가 중국에 가장 큰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 MD에 찬성하지 않고 있음

미국의 MD에 대해 신형 전략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옴

러시아

동유럽 미사일방어기지 계획을 포함해 미국의 MD체계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군축협상에 있어서 최대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

일본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이유로 MD 배치 가속화

미국의 동아시아MD 계획에 동참하는 가운데 독자적 MD 체제 개발

한국의 선택은?

MD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실익과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미국주도의 MD에는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제한된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한다는 것

이러한 모토에 따라 한국정부는 SM-3나 PAC-3보다 한 단계 아래인 SM-2와 PAC-2를 중심으로 '한국형 MD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의 기술력과 한미동맹의 현실을 고려할 때 독자적 MD 구축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음

또한 '한국형 MD'를 넘어서서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참여하는 동북아 '지역 MD'로의 편입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사실상의 MD 참여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



▲함대공 요격미사일인 SM-2(Standard Missile)를 탑재한 세종대왕함



피폭당한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리고 핵폭탄을 사용한 유일국가 미국



▲ 원자폭탄 투하 전 히로시마



▲ 원자폭탄 투하 후 히로시마



▲ 원폭 피해자들



▲ 8월 7일 히로시마 원폭구호센터 제2병원

인류 최초의 원폭 피해, 히로시마·나가사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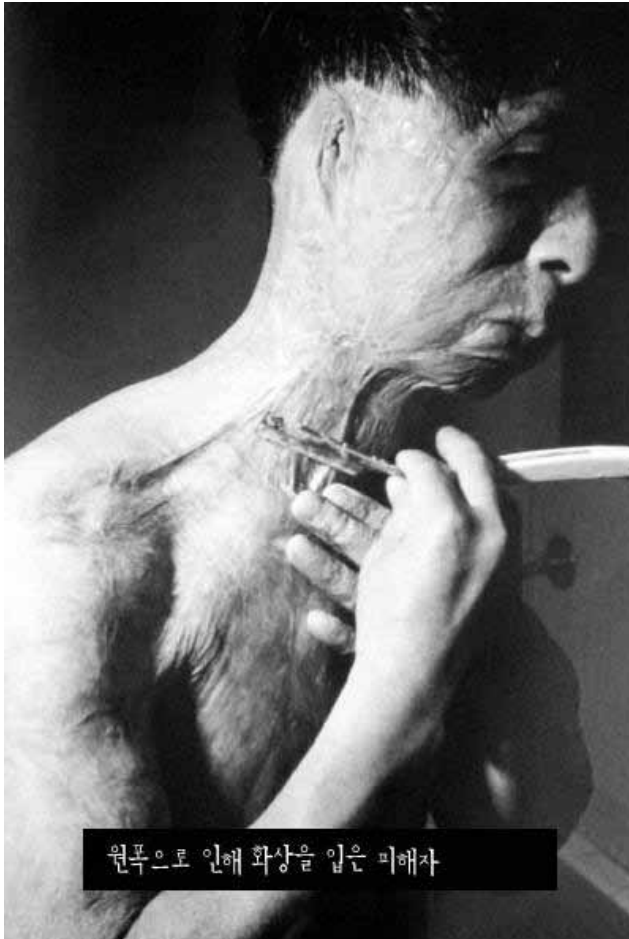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이어 8월 9일에는 일본 나가사키에 또 한발의 원자폭탄을 투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으로 70만명 인명피해 발생. 사망자 약 22만 5000명.
이 중 95% 이상이 민간인이었고, 대부분 여성이거나 어린이.
생존자의 절반 이상이 몇 달 내에 방사능 중독으로 사망.
45개의 공립병원 중 42개 전소, 전화 및 통신시설 80% 소실, 전차 65% 파괴.
특히 폭심지에서 1.5km 이내의 전차는 모두 파괴.

**“우리가 뭘 한 거지? 우리가 뭘 한 거야?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돼!”**

원자폭탄 투하로 전쟁을 끝내기를 원했으나
원자폭탄의 가공할 파괴력을 보고 핵무기 철폐를 위해
나선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을 위한 맨하탄 프로젝트
책임자 **오펜하이머**



한국인 피폭자도 7만명이나



죽음은 계속되었다

9월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까지 합하여 약 70만 명이 인명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 7만 명 이상이 조선인 사상자였다. 이들 가운데 4만 명 이상은 즉사했고, 2만여 명은 귀국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인 생존자는 피폭 부상자 약 3만 명 가운데 1%가 안 되는 2,500명 정도라고 한다. 이는 일본인 생존자 25,100명의 1%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피폭자 부상자 비율이 14.3%였던 점과 비교할 때 한국인 생존자가 대단히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살아남은 조선인 피폭자들은 철저하게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들은 일본에 의한 강제 징용-미국에 의한 피폭-조국으로부터의 외면으로 이어지는 3중고를 겪으면서 20세기 역사의 모순을 온몸으로 증언해 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녀 세대에까지 빈곤과 질병, 차별과 소외 등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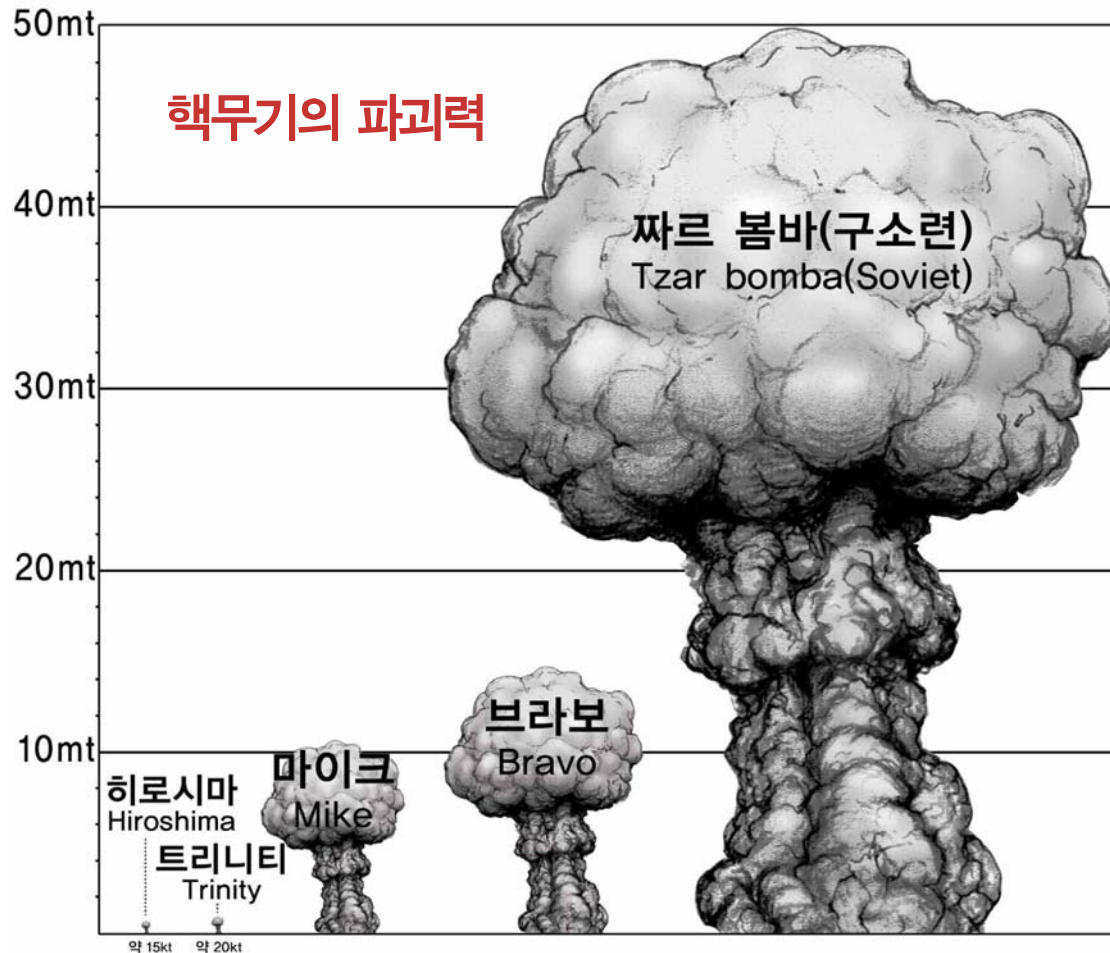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2010년 3월 경남 합천에 원폭피해자 2세를 지원하는 <평화의 집>이 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는 하나 소수의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계속해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당당히 원폭피해 2세임을 밝힌 故 김형률

고 김형률씨(1970~2005)는 지난 2003년 3월 기자회견을 통해 ‘원폭 2세 환우’라는 사실을 한국인 최초로 밝혔다. 그는 한국 원폭피해 2세 환우회를 조직하고 초대 회장을 지냈다. 그는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원폭피해자 실태 조사를 이끌어냈으며, <한국원자폭탄 피해자와 원자폭탄 2세환우의 진상규명 및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원폭피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원폭피해 2세 구제와 권익보호 활동을 벌였다. 선천성면역결핍증이라는 지병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를 세상에 알리는 데 온몸을 바친 그는 지난 2005년 5월 29일 병환으로 작고했다. 특별법 제정은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지금은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이어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핵무기 인간이 개발한 인류절멸의 무기



위력은 TNT 폭약을 기준으로 1kt=TNT 폭약 1,000톤, 1MT= TNT 폭약 1,000,000톤

- ▶ 리틀보이(Little Boy) : 1945년, 최초로 인류에 사용된 핵무기(미국, 15킬로톤)
- ▶ 트리니티(Trinity) : 1945년, 최초의 핵실험용 핵무기(미국, 20킬로톤)
- ▶ 마이크(Mike) : 1953년, 최초의 핵실험용 수소폭탄(미국, 10메가톤)
- ▶ 브라보(Bravo) : 1954년, 핵실험용 수소폭탄(미국, 15메가톤), 비키나섬에서 역사상 최악의 방사능 재앙을 불러일으킴
- ▶ 차르봄바(Tsar Bomba) : 1961년 핵실험용 수소폭탄(소련, 50메가톤),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3,800배

핵무기란?

핵분열이나 핵융합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에너지를 이용한 무기들의 총칭
핵무기는 군대를 공격하려고 만들어진 무기가 아니라

민간인 밀집지역에 타격을 주기 위해 고안된 대량살상무기

핵무기 영향의 불확실성과 환경파괴

Castle 작전의 Bravo Shot

1952년 2월 28일 남태평양 비키니 환초에서 실시한 미국의 핵실험
태평양지역의 7,000평방 마일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
지구 전체 면적의 1%에 달하는 광대한 범위가 접근금지구역이 됨

Tzar Bomba 실험

1961년 구소련의 수소폭탄
40여 킬로미터 높이의 버섯구름 생성
지구 세 바퀴를 돌 정도의 지진파가 발생
반경 백 킬로미터 이내에서 3도 화상환자 발생

핵무기 인간이 개발한 인류절멸의 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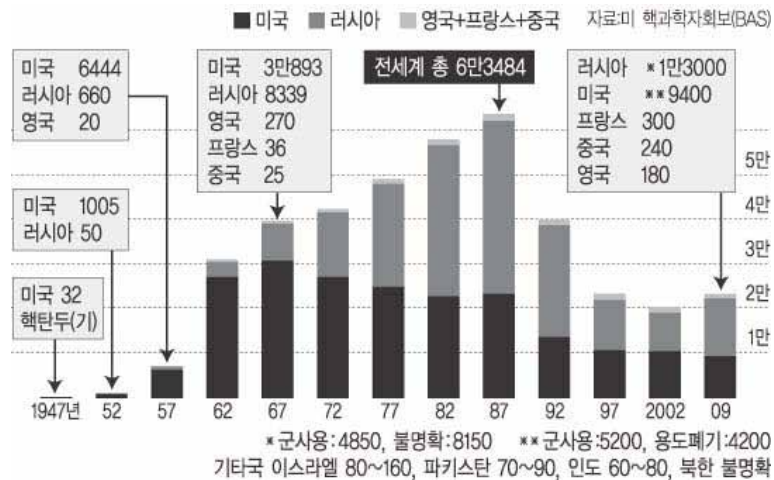
핵무기,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나?

미국과 러시아 전세계 핵무기의 94% 보유

미국의 평균적 핵탄두의 파괴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의 20배!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핵확산금지조약(NPT) 미가입국

북한 2006년 최초로 핵실험, NPT 탈퇴 상태



지구 수천 번 파괴할 핵무기 두고 '평화' 말할 수 있나

지금까지 핵무기 보유 국가들은 2,000회가 넘는 핵실험을 실시

현재 전 세계에 약 1,600 톤의 고농축 우라늄(HEU)과 500톤의 플루토늄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관리가 취약한 상황

5000개가 넘는 핵탄두가 실전 배치

2011년 기준, 세상에는 약 2만여개의 핵무기 존재하지만, 사실 아무도 얼마나 많은 핵무기가 존재하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할 수 있음

가공할 파괴력 못지않게 불투명성도 큰 문제

우리는 지구를 수천 번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에 파묻혀 살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살상력을 가진 공포의 무기, 핵무기를 지금이라도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핵 없는 세상 향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러셀·아인슈타인의 성명과 퍼그워시 회의

1955년 캐나다 퍼그워시(Pugwash)에서 철학자 버틀랜드 러셀(Bertrand Russell)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과 전 세계의 저명한 지식인 11명이 핵무기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철폐를 요구하는 성명 발표한다. 이에 부응하여 22명의 과학자들이 캐나다 퍼그워시에 모여 “핵무기 없는 세계, 전쟁 없는 세계”를 주창하는 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 이후 핵비확산조약(NPT) 등 핵실험 중지 및 핵군축에 큰 공헌을 하였고, 퍼그워시 회의는 전 세계적인 핵무기반대 운동기부로 성장함. 90년대 북핵 위기 때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를 중재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고를 인정받아 9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원자폭탄의 개발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던 아인슈타인과 ‘원폭의 아버지’로 국민과학자 대접을 받았던 오펜하이머, 핵무기의 야만성에 둘 다 추후 반핵운동에 앞장서게 됨.



▲ 2010NPT 유엔회의장 <히로시마, 나가사키 피폭 현장> 전시물



▲ 2010NPT 유엔회의장 <세계핵무기보유, 핵실험 현황> 전시물



▲ 2010NPT 유엔회의장 <핵실험 현황> 전시물



▲ 2010NPT 유엔회의장 <세계비핵지대> 전시물

핵군축 관련 국제협약, 아직 갈 길이 멀다

핵확산금지조약 NPT 발효 (1970년)

NPT 가입 비핵국가에 대해서는 평화적 핵 이용을 보장하는 대신 핵무기 보유는 금지하고, 기존 핵보유국에 대해서는 핵군축을 권고하는 조약. 비핵국가들은 핵무기 개발이나 획득이 절대 금지되고 핵사찰도 받아야 하는 반면, 핵보유국들은 단지 잠진적인 핵무기 감축에 노력한다고만 명시한 불평등 조약이어서 비핵국가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왔음.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CTBT 발효 시도 (1996년-)

군사적/평화적 목적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 CTBT는 발효를 위해서는 당시 원자력 발전능력을 보유한 44개국의 가입을 조약 발효 조건으로 명시. 미국, 중국, 이스라엘은 서명만 한 상태이며 인도, 파키스탄, 북한은 서명도 하지 않았음.

전략무기감축협정(The New START)

2010년 4월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은 새 전략(핵)무기감축협정(The New START) 서명하여 2천 200기 장거리 핵탄두 → 1천 500기 수준으로, 지상 및 해상배치 미사일 등을 현행 1천 600기 → 800기로 감축하기로 함.

핵무기협약안(NWC)

핵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비축, 이전, 사용 및 사용 위협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핵무기 사용자체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함. 반핵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2010년 NPT 재검토회의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핵무기협약 체결 요구.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은 반대, 러시아, 한국, 일본 등은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조약화되지 못하고 있음.

핵무기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 및 핵폭발 장치 생산 금지 조약(FMCT)

▷생산금지 대상에 기존의 비축분의 포함 여부 ▷ 핵물질의 정의와 범위 ▷ 검증체계 합의 등과 같은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조약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음.

핵무기 사용 및 사용위협으로부터 비핵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국제협정 체결(NSA)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으로 비핵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함. 이스라엘과 한국은 NSA 관련 유엔 결의안에 대한 기권하고 있음.

핵확산금지조약(NPT), 핵 없는 세상을 향한 디딤돌 될까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회원국 간의 합의사항이 담긴
결과문서 채택

비핵화, 핵확산 금지,
핵에너지의 평화적인 등
3개 분야에서 64개
행동계획 포함

중동비핵지대 창설에 대한
논의결과 포함

디딤돌

NPT 6조와 13개 실질적 조치들을 향후
5년간 얼마큼 이행할지 측정하기 위한
기준 포함하는 핵군축 행동계획 수립
행동계획 5번(핵군축 관련 의무) :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군축을 위한 조치들에
참여하여 2014년 NPT 예비위원회에
이러한 노력을 보고하고, 2015년 NPT
재검토회의에서 NPT 6조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후속 조치가 검토되어야 함
핵무기와 여타 모든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중동비핵지대건설(WMDFFZ)을
논의하는 회의를 2012년에 개최하기로
약속

걸림돌

2010년 NPT 검토회의 결과문서는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 간의 입장차로
양측의 불만을 사지 않는 수준으로
작성

핵무기협약(NWC)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NPT에 제시된 핵군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수준에 불과

핵군축 의무도, 비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한 어떠한 의미 있는 약속도
하지 않음

이스라엘 정부는 2012년 WMDFFZ
회의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함

NOW?

중동비핵지대 창설에 관한 회의는
여전히 열리지 않음



핵 없는 세상을 향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걸림돌

2009년 제64회 유엔 총회에서 다뤄진 핵군축 및 비확산 관련 표결에 부쳐진 결의안 13건에 대한 주요국가 표결현황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횟수	찬성	2	4	2	6	10	1	6	8	12	9	7	8
	반대	8	6	7	2	0	7	2	0	0	3	1	1
	기권	3	3	4	5	3	5	5	5	1	0	5	4
	불참	0	0	0	0	0	0	0	0	0	1	0	0
백분율(%)	찬성	15	31	15	46	77	8	46	62	92	69	54	62
	반대	65	54	58	12	0	54	8	4	0	27	4	4
	기권	8	12	8	42	23	35	42	35	12	4	46	31
	불참	0	0	0	0	0	0	0	0	0	8	0	0

〈출처〉 참여연대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2010 핵군축보고서」 <http://www.peoplepower21.org/582424>

한국 정부의 유엔 결의안 표결 결과 : 핵군축 및 비확산·비핵지대

유엔 총회 결의안 - 핵군축 및 비확산 / 관련 협약	한국정부 표결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 핵군축 의무 이행 가속하며	찬성(8건)
핵무기 전면 철폐 합의행동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핵무기용 핵분열성물질생산과 핵폭발장치생산 금지조약(FMCT)	
2015년 NPT 검토회의와 예비위원회	
중동지역 핵확산의 위험	
중앙아시아 비핵지대조약	
핵무기 없는 남반구 및 그 인접지역	
1995년 및 2000년 NPT 검토회의에서 합의한 핵군축 의무이행	반대(1건)
핵군축	기권(6건)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의 합법성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의견 이행	
핵위험 축소	
핵무기 작동 준비상태 완화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핵무기 사용위협으로부터 비핵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국제협정 체결	



▲ 2010NPT 유엔회의장

'핵 없는 세상' 말하지만 핵 포기 못하는 국가들

최대 핵보유국 미국, 핵군축에 가장 반대

**한국, 일본 비핵보유국이지만 높은 기권을 보이며
상당히 소극적**

미국 오바마 취임 후 100% 반대에서 70% 반대, 세계 핵탄두의 40% 이상을 보유한 국가로써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핵군축 결의안에 찬성하고 이를 추진해야할 의무가 있음

이스라엘 가장 낮은 찬성률, 핵무기를 보유에 대해 NCND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핵군축·비확산 체제에 커다란 걸림돌이자 이중 잣대 논란의 장본인으로써 핵확산의 구실 제공

한국, 일본 핵무기 비보유국으로서 높은 찬성률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절반 수준의 찬성률을 보임(한국 54%, 일본 62%). 특히 이 두 국가는 '1995년 및 2000년 NPT 검토회의에서 합의한 핵군축 의무이행'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결의안'에 기권을 함. 한국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이는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것 역시 핵군축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함

비핵지대 핵무기 얼씬도 하지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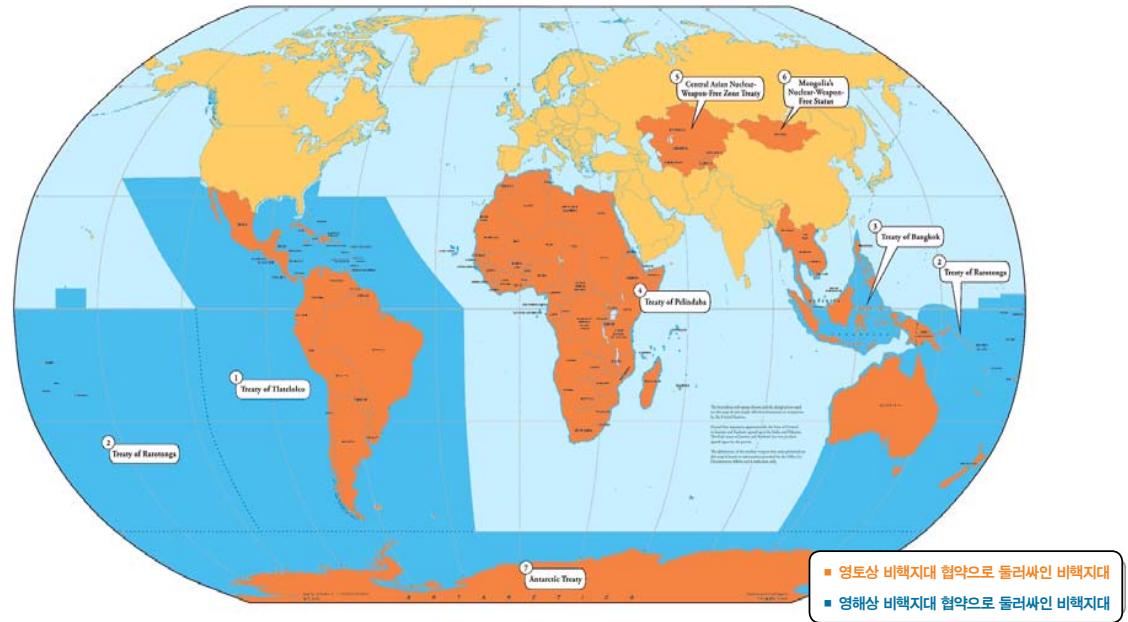
비핵지대 Nuclear Weapon Free Zone

핵무기 자체가 완전히 부재하고 핵무기 사용이 금지된 지역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 및 핵폭발 장치 생산, 획득, 다른 어떤 방식의 보유를 삼갈 뿐만 아니라 자국 영토 내에 제3자의 핵무기의 배치 금지

현존하는 비핵지대

현존해 남반구 국가들은 서로 핵무기를 보유, 배치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핵무기에 의한 공격이나 위협을 당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음.



조약명	지역	서명 개시	발효	가입국 수	5개 핵보유국 비준 현황
Treaty of Tlatelolco	중남미 및 캐리비안 지역	1967년	1969년	33개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Treaty of Rarotonga	남태평양 지역	1985년	1986년	13개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Treaty of Bangkok	동남아시아 지역	1995년	1997년	10개국	없음
Treaty of Pelindaba	아프리카 지역	1996년	2009년	53개국	중국, 영국, 프랑스
Treaty of Semipalatinsk	중앙아시아	2006년	2009년	5개국	없음
Treaty of Antarctica	남극	1959년	1961년	50개국	-

동북아 비핵지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



▲ 2010년 NPT 재검토회의에서 열린 '동북아 비핵지대를 위한 한일공동워크숍'



▲ 2010년 2월 동북아비핵지대화를 위한 한일 의원·시민사회 포럼



3+3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구상

한국·북한·일본의 3개국의 비핵지대조약체결, 미국·러시아·중국이 남북일에 대한 핵공격이나 핵위협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것

'북핵 폐기'를 넘어서

북한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과 북한에 대한 선제핵공격 계획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핵보유를 정당화하고 있음. 그러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비핵지대화 흐름이 조성되면 북한의 핵보유 정당화는 약화될 것이며, 더 나아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동참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비핵국가만이 아닌 주변 핵보유국의 핵군축도 촉진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변 핵보유국이 남북일에 대해 소극적 안전보장(핵으로 비핵국가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보장하고 서로 간에 핵으로 공격하지 않겠다고(No First Use) 약속함으로써 핵 제조 능력을 사실상 갖춘 비핵3개국의 핵무장을 억제하고, 나아가 핵보유 3개국도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도록 압박할 수 있음

동북아 비핵지대 운동의 경과

1. 1996년 5월, 우메바야시 히로미치(피스테포 특별고문), '3+3구상' 발표
2. 2003년 4월, 제네바 NPT재검토준비위원회 회의, 각국 정부대표들에게 '3+3구상' 제기
3. 2003년 11월, 참여연대 SBS 주최 국제평화회의, '3+3구상' 발표
4. 2004년 4월, 뉴욕 NPT 재검토 준비위원회, 피스테포와 평화네트워크 공동주최 워크숍, '3+3구상'에 기반한 조약 모델 제안
5. 2005년 2월, GPPAC(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동북아회의, 동북아행동동제로 동북아비핵지대화 채택
6. 2010년, 2월, 한일 시민단체와 PNND 공동으로 '동북아 비핵지대를 위한 한일국제회의' 개최,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한일의원 공동성명' 발표

7. 2010년 5월, NPT 재검토회의, 한일 국회의원, 시민단체, 일본 자치단체장 공동주최로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한일공동워크숍' 개최
8. 2011년 3월, 한일 PNND 주최로 '동북아비핵화를 위한 한일포럼' 개최

CSM&V(civilsocietymonitoringandverificationnetwork)

동북아 비핵지대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핵문제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노틸러스 아리가 진행한 한일간 연구프로젝트

Mayors for Peace (평화시장회의)

도시의 비핵평화를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자치단체장들의 네트워크.

2012년 9월 1일 현재 154개국 5400개 지자체가 가입

한국에서는 대구와 합천, 평택, 제주 포항, 고양, 강정마을 등 총 10개 도시 및 지자체가 가입

PNND(핵군축을 위한 세계의원 네트워크)

각국의 국회의원들이 비핵군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네트워크

한국과 일본의 PNND는 북핵문제는 물론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위해 매년 정례모임을 갖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비핵화라운드테이블

한국의 평화, 환경단체들이 핵없는 한반도, 동북아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모색,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네트워크



Peace Now!